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Individual Values on Childbirth and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강 사 신 호 영
교 수 방 은 령

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Welfare, Hanseo University

Lecturer : Hyo Young Shin

Professor : Eun Ryoung B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actually helping those childbirth, and also discuss the possible directions of this policy to unfold in the future, should take. For this, We have surveyed 412 married and 437 unmarried men and wome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values that influence childbirth, From these respondents and we interviewed and surveyed recipients of grants (244people),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 (41people), and experts (34people) to investigate their social view on the Korean government's imp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the people (unmarried 70.3%, married 69.1%) surveyed said that important life objectives for them. Secondly, most of the people(male 44.4%, female 73.8%) surveyed said that once married shied away from having babies, (a) due to the finance and childcare burden is heavy of running a family while both parents are fulltime employed (b)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pregnant due to health problems, and (c) foremost because having several children exacerbates their financial burden. Thirdly, grant recipients(75.4%),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65.9%), and experts(53.0%) all said that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as little impact on their childbirth. Finally, it was established that the incentives to encourage childbirth is best suited for individuals that favor having many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출산장려정책(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출산율(birth rate), 저출산(low birthrate)

Corresponding Author : Eun Ryoung Bang, 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Welfare, Hanseo University, 360, Daegok-ri, Haemi-myeon, Seosan, chung-nam, 356-706, Korea Tel: +82-41-660-1047 E-mail: erbanhanbit@yahoo.co.kr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2008년 기준)으로 현재 세계 평균 출산율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 평균인 1.60명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출산율 감소 현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www.nso.go.kr).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존립과 직결되는 생산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신효영, 방은령, 2008b).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도부터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으나(신효영, 방은령, 2007) 아직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우며(신효영, 방은령, 2008a) 현재 매우 낮은 출산율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측되고 있다(신효영, 방은령, 2006a; 신효영, 방은령, 2006b).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가족정책의 범주 내에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모보험제도, 아동수당제도 및 공적 보육제도 등을 시행한 결과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정연숙, 2005; 이문옥, 2006; 위점애, 2007; 최문숙, 2007). 이것은 한나라의 출산율이 출산장려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출산 당사자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독일의 예가 그렇다. 독일은 스웨덴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율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부가 아동수당, 자녀세금 공제, 주부연금제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이문옥, 2006; 입법정책연구회, 2006; 위점애, 2007). 그러므로 한 나라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출산율이 감소되는 이유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즉,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을 왜 기피하는지 그것이 개인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전반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경우 출산의도를 갖게 되고 출산행동을 결정짓게 하는지 분석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태도와 행위의 부합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 중 가장 잘 알려진 이성적 행위모형(Fishbein & Ajzen, 1975; Fishbein & Ajzen, 1980)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주관적 사회규범)은 어떠한가

이것이 출산행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출산행동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주관적 사회규범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되는데 두 요인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산행동이 나타나는데 비중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출산행동을 격려하는데 있어서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를 낳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가치관인지 아니면 주관적 사회규범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은 단지 수량적인 접근이 아닌 출산 해당자들의 반응을 질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히 개인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인 출산장려정책이 출산 해당자들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 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과 관련된 결혼·자녀·성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출산(자녀)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저하 현상과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할 것이다. 또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으로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과 출산과 관련된 주관적 사회규범의 비중이 어떠한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 해당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그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출산동기요인, 출산방해요소,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체감효과를 파악하고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 하에서 출산을 결정할 수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은 어떠한가?

1) 결혼, 자녀,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한가?

2) 결혼,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체감효과는 어떠한가?

2)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3. 용어정의

1) 개인 가치관

본 연구에서 개인 가치관은 Fishbein과 Ajzen이 제시한 이성적 행위모형(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근거하여 출산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출산과 관련한 가치관 및 주관적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1-1) 가치관

본 연구에서 가치관은 Fishbein과 Ajzen이 제시한 이성적 행위모형(TRA)에 근거하여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서 출산과 관련한 가치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을 의미한다.

1-2) 주관적 사회규범

본 연구에서 주관적 사회규범은 Fishbein과 Ajzen이 제시한 이성적 행위모형(TRA)에 근거하여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서 출산과 관련한 주관적 사회규범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여길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즉,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과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분위기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1】은 대학생을 제외한 만19세 이상의 미혼자 437명, 출산이 가능한 만40세 이하의 기혼자 412명으로 총 84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¹⁾

2)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2】는 수혜대상자 244명, 행정실무자 41명, 전문가 34명으로 총 31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²⁾

〈표 2-1〉 미혼자의 인적사항

변인	구분	N(%)		
		남녀	남	여
미혼자	전체	437(100.0)	158(100.0)	279(100.0)
	20대	335(76.7)	105(66.5)	230(82.4)
	30대	99(22.7)	52(32.9)	47(16.8)
연령	40대	3(0.7)	1(0.6)	2(0.7)
	고졸	73(16.7)	26(16.5)	47(16.8)
	대졸	342(78.3)	123(77.8)	219(78.5)
학력	대학원졸	22(5.0)	9(5.7)	13(4.7)
	유무	419(95.9)	149(94.3)	270(96.8)
직업	부	18(4.1)	9(5.7)	9(3.2)
	대도시	103(23.6)	52(32.9)	51(18.3)
거주지역	일반도시	219(50.1)	59(37.3)	160(57.3)
	읍·면	115(26.3)	47(29.7)	68(24.4)
월소득	100만원 미만	73(16.7)	23(14.6)	50(17.9)
	200만원 미만	250(57.2)	74(46.8)	176(63.1)
	300만원 이상	114(26.1)	61(38.6)	53(19.0)

〈표 2-2〉 기혼자의 인적사항

변인	구분	N(%)		
		남녀	남	여
기혼자	전체	412(100.0)	110(100.0)	302(100.0)
	20대	46(11.2)	6(5.5)	40(13.2)
	30대	277(67.2)	71(64.5)	206(68.2)
연령	40대	89(21.6)	33(30.0)	56(18.5)
	고졸	115(27.9)	17(15.5)	98(32.5)
	대재7	(1.7)	2(1.8)	5(1.7)
학력	대졸	259(62.9)	74(67.3)	185(61.3)
	대학원졸	31(7.5)	17(15.5)	14(4.6)
직업	유무	294(71.4)	105(95.5)	189(62.6)
	부	118(28.6)	5(4.5)	113(37.4)
자녀	유무	362(87.9)	90(81.8)	272(90.1)
	부	50(12.1)	20(18.2)	30(9.9)
거주지역	대도시	65(15.8)	29(26.4)	36(11.9)
	일반도시	223(54.1)	50(45.5)	173(57.3)
	읍·면	124(30.1)	31(28.2)	93(30.8)
월소득	200만원 미만	65(15.8)	15(13.6)	50(16.6)
	300만원 미만	105(25.5)	30(27.3)	75(24.8)
	300만원 이상	242(58.7)	65(59.1)	177(58.6)

- 1) 이는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신효영, 방은령, 2006a; 신효영, 방은령, 2006b; 신효영, 방은령, 2007; 신효영, 방은령, 2008a) 결과에서 이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출산 해당자들의 개인 가치관을 조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혼인이 가능한 미혼자 즉, 대학생을 제외한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 우리나라 출산아의 98%이상(통계청, www.nso.go.kr)이 혼인자에서 태어난 것을 볼 때 대학생을 제외한 미혼자가 본 연구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이는 선행연구(신효영, 방은령, 2006a; 신효영, 방은령, 2006b; 신효영, 방은령, 2007; 신효영, 방은령, 2008a; 신효영, 방은령, 2008b)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저출산을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사람 등 그 대상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의 대상이 되는 수혜대상자, 출산지원 및 장려와 관련된 부서에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실무자, 그리고 저출산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2-3〉 수혜대상자의 인적사항

						N(%)
변인	구분	남녀	변인	구분	남녀	
연령	20대 초반	4(1.5)	평균 소득	200미만	44(18.0)	
	20대 후반	26(10.7)		300미만	70(28.7)	
	30대 초반	117(48.0)		300이상	130(53.3)	
	30대 후반	97(39.8)				
학력	고졸	81(33.2)	직업	유무	147(60.2)	
	대졸	135(55.3)			97(39.8)	
	대학원졸	28(11.5)				
현재 자녀수	0명	19(7.8)	더 낳을 자녀수	0명	161(66.0)	
	1명	68(27.9)		1명	58(23.8)	
	2명	141(57.8)		2명	23(9.4)	
	3명	16(6.6)		3명	2(0.8)	

〈표 2-4〉 행정실무자의 인적사항

									N
구분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충남	계룡시	1	서산시	1	당진군	1	예산군	1	
	공주시	1	아산시	1	부여군	1	청양군	1	
	논산시	1	천안시	1	서천군	1	태안군	1	
	보령시	1	금산군	1	연기군	1	홍성군	1	
서울	종로구	1	성북구	1	마포구	1	동작구	1	
	중구	1	강북구	1	양천구	1	관악구	1	
	용산구	1	도봉구	1	강서구	1	서초구	1	
	성동구	1	노원구	1	구로구	1	강남구	1	
	광진구	1	은평구	1	금천구	1	송파구	1	
	동대문구	1	서대문구	1	영등포구	1	강동구	1	
	중랑구	1							

※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실무자들의 요구에 따라 담당부서 및 성별과 연령은 기재하지 않음.

〈표 2-5〉 전문가의 인적사항

						N(%)
변인	구분	남녀	변인	구분	남녀	
성별	남	26(76.5)	직업	의사	30(88.2)	
	여	8(23.5)		교수	70(28.7)	

〈표 2-6〉 가치관에 대한 질문 내용

구분	질문내용	질문유형
결혼관	결혼의 필요성	개방형·폐쇄형
자녀관	자녀의 필요성	개방형·폐쇄형
성역할관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개방형·폐쇄형

2. 조사내용

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

본 연구의 【연구문제1】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에 대해 의견을 묻는 내용(표 2-6, 7)으로 선행연구(신효영, 방은령, 2006a; 신효영, 방은령, 2006b; 신효영, 방은령, 2007; 신효영, 방은령, 2008a; 신효영, 방은령, 2008b)를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그 중 개방형 질문은 폐쇄형 질문 응답에 대한 이유나 관련된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은 미혼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으며,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질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_____.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안 해도 무방하다. ④ 안하는 것이 좋다.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_____

〈표 2-7〉 주관적 사회규범에 대한 질문 내용

구분	질문내용	질문유형
결혼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결혼을 방해하는 이유	개방형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	개방형

2)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본 연구의 【연구문제2】에서 사용된 질문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표 2-8)으로 선행연구(신효영, 방은령, 2006a; 신효영, 방은령, 2006b; 신효영, 방은령, 2007; 신효영, 방은령, 2008a; 신효영, 방은령, 2008b)를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혜대상자는 질문지를 통해, 행정실무자와 전문가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예, 아니오

*. 알고 계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표 2-8〉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 내용

구분	질문내용	질문유형
출산장려정책의 체감효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이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인식	개방형·폐쇄형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모색	출산을 격려하는 동기요인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내용	개방형

3. 연구 절차

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

본 연구의 【연구문제1】을 위해 2007년 5월 한달 동안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1000부 배부하여 89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최종 84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본 연구의 【연구문제2】를 위해 2008년 8월 한달 동안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인천·경기·충남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질문지 배부 및 면접조사 하였다.

그 중 수혜대상자의 경우 출생아 전체의 50.8%를 차지(통계청, 2008)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상위를 나타내고 있는 충남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300부 배부하여 27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최종 24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행정실무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와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출산지원 및 장려와 관련된 부서로 한정하여 연구자가 직접 전화(37개) 및 방문(4개)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60분이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경우는 서울과 충남을 중심으로 저출산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은 석사 학위 이상의 연구보조원 3명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하였다.

4. 자료 분석

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

본 연구의 【연구문제1】에서 수집된 자료 중 폐쇄형 질문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은 내용분석(content-analysis)을 하였다. 내용분석은 고유번호(미혼 남성은 A001-A158, 미혼 여성은 A201-A479, 기혼 남성은 A501-A610, 기혼 여성은 A701-A1002)를 응답자에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은 대개 1-2문장으로 진술되어 있었으며 연구자가 그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내용은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과 결혼을 방해하는 이유로 분류되었으며 분석범주는 〈표 2-9〉와 같다.

또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로 구성되었으며 분석범주는 〈표 2-10〉과 같다.

내용분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회복지 전공자 1명과 본 연구자가 A001-A020, A201-A230, A501-A520, A701-A730에 대하여 분석자간 신뢰도를 구하였으며, A001-A158, A201-A479, A501-A610, A701-A1002에 대하여 연구자가 2번 분석하여 분석자내 신뢰도를 구하였다(표 2-11).

2)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본 연구의 【연구문제2】에서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및 내용분석을 하였다. 내용분석은 고유번호(수혜대상자는 B001-B120·B201-B320, 행정실무자는 B401-B416·B501-B525, 전문가는 B601-B620·B701-B714)를 응답

〈표 2-9〉 결혼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내용분석 범주화

분석내용	범주명	내용 설명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경제적 여유	안정된 직장, 사회적 기반, 수입, 재산, 집, 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미있는 만남	배우자에 대한 믿음·신뢰·가치관·성격, 좋은 사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결혼의지	결혼하고 싶어질 때,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한 확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결혼을 방해하는 이유	경제력 부재	혼수준비, 예단 등과 같은 결혼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의미없는 만남	배우자의 결혼·자녀·인생에 대한 가치관, 성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결혼의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귀찮아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서 등의 이유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관계	양가의 가치관 차이, 부모님과과의 친분, 가정환경, 집안 차이, 생활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 2-10〉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내용분석 범주화

분석내용	범주명	내용 설명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경제적 여유	급여 상승, 로또, 경제적 풍요, 안정된 소득, 내집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치관	낳고 싶을 때, 부부가 원하면, 특정성별 선호, 결혼생활 안정, 육아부담감소, 시간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건강	내가 젊다면, 생기면 낳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	국가정책	공교육 확대·사교육 대책 등 교육 부담, 보육비·교육비·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노후보장, 사회복지제도, 육아휴직 등 국가 출산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제적 부담감	보육비, 교육비, 양육비 등을 포함한다.
	육아부담	남편과 가족의 도움 없음,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의 어려움, 사회 환경 미흡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치관 부재	자녀에게 희생하는 삶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한 내 삶 추구,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부부만 행복하려고, 현재 자녀로 충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건강문제	불임, 나이가 많아서, 건강상 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 2-1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내용분석 신뢰도

분석내용	A-A'	A'-B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94	.93
결혼을 방해하는 이유	.94	.93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1.0	.96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	1.0	.96

A : 연구자 1차 분석
 A' : 연구자 2차 분석
 B : 사회복지 전공자 분석

자에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질문지 및 면접내용은 문장으로 진술되었으며 연구자가 문장전체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출산 기피 이유, 다자녀 출산 선호 이유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요구 내용이었으며 분석범주는 〈표 2-12〉와 같다.

내용분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회복지 전공자 1명과 본 연구자가 B001-B012·B201-B312, B401-B408·B501-B512, B601-B610·B701-B707에 대하여 분석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또 B001-B120·B201-B320, B401-B416·B501-B525, B601-B620·B701-B714에 대하여 연구자 2명 분석하여 분석자내 신뢰도를 구하였다(표 2-13).

〈표 2-13〉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내용분석 신뢰도

분석내용	A-A'	A'-B
출산을 격려하는 동기요인	1.00	.96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	.93	.93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내용	.90	.86

A : 연구자 1차 분석
 A' : 연구자 2차 분석
 B : 사회복지 전공자 분석

〈표 2-12〉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내용분석 범주화

분석내용	범주명	내용 설명
출산을 격려하는 동기요인	가치관	가족의 화목과 형제간의 우애를 높이기 위해, 자녀가 외롭지 않고 서로 도와라고 등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포함한다.
	경제력	가계수입에 있어서 자녀 양육 지출에 어려움이 없을 때, 경제적 여유 등을 포함한다.
	육아선호	아들 혹은 딸을 낳고 싶어서, 아이가 좋아서, 자녀사랑 등을 포함한다.
	기타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	경제적 부담감	보육비, 교육비, 양육비 등을 포함한다.
	육아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사회적 기반의 부족을 포함한다.
	가치관 부재	자녀에게 희생하는 삶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한 내 삶 추구의 내용, 출산의 두려움 등을 포함한다.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내용	보육비	자녀가 취학 전에 보육기관에 보내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과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다.
	교육비	자녀가 취학 후에 공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양육비	보육비와 양육비를 제외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의·식·주, 육아지원, 의료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보육서비스	안전한 보육시설, 교사 전문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정책	공교육확대, 사교육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사회환경 개선	사회분위기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육아휴직, 가사노동가치상승, 정책적 지원, 복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 3-1〉 결혼관

N(%)

구분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합계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안해도 무방하다	안하는 것이 좋다		
미혼	남	51(32.3%)	67(42.4%)	37(23.4%)	3(1.9%)	158(100.0%)
	여	49(17.6%)	140(50.2%)	85(30.5%)	5(1.8%)	279(100.0%)
	계	100(22.9%)	207(47.4%)	122(27.9%)	8(1.8%)	437(100.0%)
기혼	남	48(43.6%)	41(37.3%)	19(17.3%)	2(1.8%)	110(100.0%)
	여	49(16.2%)	147(48.7%)	94(31.1%)	12(4.0%)	302(100.0%)
	계	97(23.5%)	188(45.6%)	113(27.4%)	14(3.4%)	412(100.0%)

〈표 3-2〉 자녀관

N(%)

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자녀는				합계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다	절대원하지 않는다		
미혼	남	85(53.8%)	65(41.1%)	5(3.2%)	3(1.9%)	158(100.0%)
	여	141(50.5%)	119(42.7%)	9(3.2%)	10(3.6%)	279(100.0%)
	계	226(51.7%)	184(42.1%)	14(3.2%)	13(3.0%)	437(100.0%)
기혼	남	73(66.4%)	36(32.7%)	0(0%)	1(0.9%)	110(100.0%)
	여	210(69.5%)	79(26.2%)	9(3.0%)	4(1.3%)	302(100.0%)
	계	283(68.7%)	115(27.9%)	9(2.2%)	5(1.2%)	412(100.0%)

Ⅲ. 연구결과

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

1) 가치관

(1) 결혼관

본 연구대상자들은 결혼에 대해 〈표 3-1〉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1〉에서 보면 결혼여부와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 노후에 함께 지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들이 높게 나타났다.

(2) 자녀관

본 연구대상자들은 자녀에 대해 〈표 3-2〉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2〉에서 보면 결혼여부와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삶에 있어서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3) 성역할관

①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성역할관

본 연구대상자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성역할에 대해 〈표 3-3〉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3〉에서 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 미혼남성을 제외한 미혼

〈표 3-3〉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성역할에 대한 인식

N(%)

구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를 돌보는 것에				합계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			
	매우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절대반대한다		
미혼	남	5(3.2%)	72(45.6%)	76(48.1%)	5(3.2%)	158(100.0%)
	여	17(6.1%)	126(45.2%)	122(43.7%)	14(5.0%)	279(100.0%)
	계	22(5.0%)	198(45.3%)	198(45.3%)	19(4.3%)	437(100.0%)
기혼	남	9(8.2%)	63(57.3%)	34(30.9%)	4(3.6%)	110(100.0%)
	여	18(6.0%)	153(50.7%)	114(37.7%)	17(5.6%)	302(100.0%)
	계	27(6.6%)	216(52.4%)	148(35.9%)	21(5.1%)	412(100.0%)

〈표 3-3〉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성역할에 대한 인식

N(%)

구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에				합계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			
	매우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절대반대한다		
미혼	남	5(3.2%)	72(45.6%)	76(48.1%)	5(3.2%)	158(100.0%)
	여	17(6.1%)	126(45.2%)	122(43.7%)	14(5.0%)	279(100.0%)
	계	22(5.0%)	198(45.3%)	198(45.3%)	19(4.3%)	437(100.0%)
기혼	남	9(8.2%)	63(57.3%)	34(30.9%)	4(3.6%)	110(100.0%)
	여	18(6.0%)	153(50.7%)	114(37.7%)	17(5.6%)	302(100.0%)
	계	27(6.6%)	216(52.4%)	148(35.9%)	21(5.1%)	412(100.0%)

〈표 3-4〉 맞벌이를 할 경우 성역할에 대한 인식

N(%)

구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				합계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			
	매우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절대반대한다		
미혼	남	7(4.4%)	62(39.3%)	68(43.0%)	21(13.3%)	158(100.0%)
	여	9(3.2%)	70(25.1%)	173(62.0%)	27(9.7%)	279(100.0%)
	계	16(3.7%)	132(30.2%)	241(55.1%)	48(11.0%)	437(100.0%)
기혼	남	11(10.0%)	49(44.5%)	42(38.2%)	8(7.3%)	110(100.0%)
	여	15(5.0%)	120(39.7%)	143(47.4%)	24(7.9%)	302(100.0%)
	계	26(6.3%)	169(41.0%)	185(44.9%)	32(7.8%)	412(100.0%)

여성과 기혼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미혼남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따르면 결혼 후 자신에게 주어지는 가족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결혼을 지연하고 있거나 맞벌이가 가능한 배우자를 찾느라 결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미혼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가장 이상적인 역할분담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맞벌이는 남편의 무능력함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우자를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배우자를 찾느라 결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경제적 부담이 없는 가운데 자아실현을 위한 맞벌이는 원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한편 기혼자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에 대해 결혼생활을 통해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기혼자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경제적 부담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남성의 경우 경제적 역할만 담당하고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역할만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기혼자나 미혼자 모두 현재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하에 따라 성역할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② 맞벌이를 할 경우 성역할관

본 연구대상자들은 맞벌이를 할 경우 성역할에 대해 〈표

3-4〉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4〉에서 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맞벌이를 할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 기혼남성을 제외한 기혼여성, 미혼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에 대해 미혼자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양성평등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기혼자들은 여성의 경우 가족의 생계는 부부 공동의 몫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남성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혼자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남성의 경우 경제적 책임을 함께 하면 양육도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여성의 경우 양육도 분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혼자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여하에 따라 성역할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주관적 사회규범

(1) 결혼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①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본 연구결과 미혼자들의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표 3-5〉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5〉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N(%)

구분		경제적 여유	의미있는 만남	결혼의지	합계
미혼	남	62(44.0)	59(41.8)	20(14.2)	141(100)
	여	64(25.7)	110(44.2)	75(30.1)	249(100)
	계	126(32.3)	169(44.3)	95(24.3)	390(100)

〈표 3-5〉에서 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자신의 경제력(집, 차, 재산 등)을 준비한 후에 의미있는 만남을 원하고, 미혼여성의 경우 의미있는 만남 후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면 결혼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② 결혼을 방해하는 이유

본 연구결과 미혼자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이유로 〈표 3-6〉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6〉에서 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식 비용, 집, 차 등과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경제력을 갖추었을 때에는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를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며 그 후에는 경제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이 지연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본 연구결과 기혼자들의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표 3-7〉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7〉에서 보면 기혼자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다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 가장 많았다. 또한 출산은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자녀를 원하고 출산에 따른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생겼을 때 출산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②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

본 연구결과 기혼자들의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로 〈표 3-8〉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8〉에서 보면 기혼남성의 경우 건강이 허락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보류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은 자녀를 키워야 하는 역할까지 가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보류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의한 육아비용 부담은 수입보다 지출을 크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표 3-6〉 결혼을 방해하는 이유

N(%)

구분		경제력 부재	의미있는 만남	결혼의지	가족관계	합계
미혼	남	52(37.4)	50(36.0)	15(10.8)	22(15.8)	139(100)
	여	72(29.5)	102(41.8)	12(4.9)	58(23.8)	244(100)
	계	124(32.4)	152(39.7)	27(7.0)	80(20.9)	383(100)

〈표 3-7〉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N(%)

구분		경제적 여유	가치관	건강	국가정책	합계
기혼	남	30(44.1)	14(20.6)	13(19.1)	11(16.2)	68(100)
	여	62(36.9)	46(27.4)	29(17.2)	31(18.5)	168(100)
	계	92(38.9)	60(25.3)	43(18.1)	42(17.7)	236(100)

〈표 3-8〉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

N(%)

구분		경제적 부담감	육아부담	가치관	건강문제	합계
기혼	남	9(25.0)	7(19.4)	10(27.8)	10(27.8)	36(100)
	여	34(23.4)	73(50.4)	9(6.2)	29(20.0)	145(100)
	계	43(23.8)	80(44.2)	19(10.5)	39(21.5)	181(100)

〈표 3-9〉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수혜대상자들의 인식

구분	N(%)		
	지식여부	수혜여부	만족여부
유	202(83.2)	54(22.1)	11(20.4)
무	42(17.2)	190(77.9)	43(79.6)
계	244(100.0)	244(100.0)	54(100.0)

2.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출산장려정책의 체감효과

(1)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이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수혜대상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필요한 내용을 지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수혜대상자들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혜대상자들이 출산장려정책 내용을 알고 있는지(지식여부), 지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수혜여부), 수혜결과 만족하는지(만족여부)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수혜대상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표 3-9〉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9〉를 보면 수혜대상자의 83.2%는 출산장려정책의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22.1% 만이 혜택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혜택을 본 사람 중 20.4% (전체의 4.5%) 만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출산장려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83.2%(202명)의 수혜대상자는 지원내용에 대해 〈표 3-10〉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을 보면 과반수이상의 수혜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해서만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있어도 혜택

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내용이 출산 해당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계획에 부정적일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인식

연구대상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해 〈표 3-11〉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11〉에서 보면 수혜대상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출산장려정책의 지원내용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 행정실무자들은 시행과정에 있어서 수혜자들의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2)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1) 출산을 격려하는 동기요인

본 연구대상들의 출산을 격려하는 동기요인으로 〈표 3-12〉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12〉에서 보면 본 수혜대상자와 행정실무자들은 다자녀를 선호하는 가치관이, 전문가는 기타에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출산을 격려하는 중요한 동기요인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혜대상자들과 행정실무자들의 경우, 다자녀를 선호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출산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었고, 특히 수혜대상자 중 다자녀를 선호하는 경우,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자녀출산은 출산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

〈표 3-10〉 수혜대상자들이 알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N(%)					
출산축하금	산모도우미	보육비	육아휴직	내용모름	계
130(64.4)	8(4.0)	38(18.8)	3(1.5)	23(11.4)	202(100)

〈표 3-11〉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인식

구분	N(%)			
	효과있음	보통	효과없음	계
수혜대상자	60(24.6)	0(0)	184(75.4)	244(100)
행정실무자	3(7.3)	11(26.8)	27(65.9)	41(100)
전문가	16(47.0)	0(0)	18(53.0)	34(100)
계	79(24.8)	11(3.4)	229(71.8)	319(100)

〈표 3-12〉 출산을 격려하는 동기요인

N(%)

구분	가치관	경제력	육아선호	기타	계
수혜대상자	183(75.0)	23(9.4)	17(7.0)	21(8.6)	244(100)
행정실무자	23(56.1)	3(7.3)	2(4.9)	13(31.7)	41(100)
전문가	5(14.7)	10(29.4)	1(2.8)	18(52.9)	34(100)
계	211(66.1)	36(11.3)	20(6.3)	52(16.3)	319(100)

〈표 3-13〉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

N(%)

대상	경제적 부담	육아부담	가치관 부재	계
수혜대상자	165(67.6)	57(23.4)	22(9.0)	244(100)
행정실무자	19(46.3)	19(46.3)	3(7.4)	41(100)
전문가	15(44.1)	17(50.0)	2(5.9)	34(100)
계	199(62.4)	93(29.2)	27(8.4)	319(100)

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은 경제력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주면 출산 동기가 증가할 거라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

(2)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

본 연구대상들의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로 〈표 3-13〉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13〉을 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로 경제적 부담과 육아부담이 출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가계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맞벌이를 하는 경우, 출산으로 인해 보육비, 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맞벌이가 가계수입에 도움이 되지 못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있어서 육아는 방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에 따라 오르지 않으니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져요(B294).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보육비용이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만3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가계경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해도 수입도 그리 많지 않고, 기저귀, 분유 값 등 자녀 양육비는 많이 필요하구요(B295).”

(3)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내용

본 연구대상들이 인식한 출산을 격려할 수 있는 정책내용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환경 개선으로 구분되었다.

〈표 3-14〉를 보면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내용은 수혜대상자, 행정실무자, 전문가 모두 경제적 지원(보육비, 교육비, 양육비)과 사회적 환경개선(보육서비스, 교육정책, 사회분위기)이었으며 이중에서도 사회적 환경 개선이 더 요구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① 출산을 격려하는 경제적 지원

〈표 3-14〉에서 경제적 지원의 경우 보육비, 교육비, 양육비로 범주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15〉과 같이 나타났다. 이들 중 보육비는 자녀가 취학 전에 보육기관에 보내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비는 자녀가 취

〈표 3-13〉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

N(%)

대상	경제적 부담	육아부담	가치관 부재	계
수혜대상자	165(67.6)	57(23.4)	22(9.0)	244(100)
행정실무자	19(46.3)	19(46.3)	3(7.4)	41(100)
전문가	15(44.1)	17(50.0)	2(5.9)	34(100)
계	199(62.4)	93(29.2)	27(8.4)	319(100)

〈표 3-14〉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내용

N(%)

구분	① 경제적 지원	② 사회적 환경개선	계
수혜대상자	109(44.7)	135(55.3)	244(100)
행정실무자	14(34.1)	27(65.9)	41(100)
전문가	6(17.6)	28(82.4)	34(100)
계	129(40.4)	190(59.6)	319(100)

〈표 3-15〉 출산을 격려하는 경제적 지원

	보육비	교육비	양육비	계	N(%)
수혜대상자	17(15.6)	33(30.3)	59(54.1)	109(100)	
행정실무자	4(28.6)	4(28.6)	6(42.8)	14(100)	
전문가	3(50.0)	2(33.3)	1(16.7)	6(100)	
계	24(18.6)	39(30.2)	66(51.2)	129(100)	

〈표 3-16〉 출산을 격려하는 사회적 환경개선

	보육서비스	교육정책	사회분위기	계	N(%)
수혜대상자	60(44.4)	59(43.7)	16(11.9)	135(100)	
행정실무자	9(33.3)	5(18.5)	13(48.2)	27(100)	
전문가	11(39.3)	6(21.4)	11(39.3)	28(100)	
계	80(42.1)	70(36.8)	40(21.1)	190(100)	

학 후에 공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양육비는 보육비와 교육비를 제외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의, 식, 주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3-15〉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양육비 지원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② 출산을 격려하는 사회적 환경개선

〈표 3-14〉에서 사회적 환경개선의 경우, 보육서비스, 교육정책, 사회분위기로 범주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16〉과 같이 나타났다. 이들 중 보육서비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프로그램 등을 의미하며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보육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며 사회분위기는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로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포함하는 다자녀 출산에 대한 호호적 분위기를 의미한다.

〈표 3-16〉에서 보면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보육서비스의 지원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결혼을 해야 하며 자녀도 둘 이상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역할관의 경우 맞벌이여부, 결혼여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미혼남성들을 제외한 미혼여성, 기혼남성, 기혼여성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할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기혼남성들을 제외한 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여성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과 출산에 대

해 갖고 있는 사회적 조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체감효과가 낮다고 하였다. 특히 수혜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출산지원 내용이 현실적으로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결과 다자녀를 선호하는 개인 가치관이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동기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육아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결국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경제적 지원보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환경개선을 요구하였다. 즉, 경제적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결혼과 출산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결혼과 출산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력 부족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규범을 형성하고 결혼과 출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지연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 지원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 가치관은 격려요소가 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력 부족은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출산과 육아는 가치 있는 일이며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되는 사회적 인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와 전세자금마련 제도 등은 결혼에 소요되는 경제력을 지원하여 결혼률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제정 및 시행은 보육서비스 체계가 재정비되는 과정으로 자녀의 양육책임이 가정에서 국가 및 사회로 전환하는 노력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력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밖에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 역시 가정의 경제력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경제력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격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자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결혼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 결혼 준비자금이 부족해서, 여성의 경우는 의미 있는 만남을 하지 못해서 결혼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출산아의 98% 이상이 혼인자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안정된 가정의 증가가 곧 출산율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가지 있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결혼률을 증가시키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자들의 결혼을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남성의 경우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 기간을 감소, 여성의 경우 배우자를 찾기 위한 의미있는 만남의 장 마련과 같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장려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혼의 지원책과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자녀 가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출산 해당자들은 다자녀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출산에 대한 직장 혹은 주변사회

의 부적절한 반응, 육아부담, 경제력 부재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자녀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규범의 형성으로 인하여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자녀의 존재를 행복으로 여기는 분위기, 일하는 여성의 다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격려, 전업주부의 다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부여 등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양 가점제 부여, 보육비와 교육비 및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는 정책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밖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산전검사 무료, 출산 시 병원비 면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충분한 예산규모를 요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기업과 사회에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 정책의 시행도 원만해질 것이다.

넷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출산율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현재의 막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해당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산을 격려하는 동기요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방해요소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들은 출산을 격려하는 동기요인으로 경제적 지원 외에 사회적 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즉,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방해요소로서 정부의 해결이 요구되지만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면 육아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이나 보육비 지원이 출산해당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보육비 지원은 공보육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개인이나 보육시설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실질적인 가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기관을 설립하고, 양질의 보육전문가를 양성하며,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마련된 양질의 보육과정을 공보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됨은 물론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공보육이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

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며 지원하는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신효영, 방은령(2006a). 결혼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한국심리학회 2006년도 연차학술대회논문집**, 326-327.

신효영, 방은령(2006b). 출산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6년도 주최 국제학술대회**, 132.

신효영, 방은령(2007). 미혼과 기혼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 비교. **한국심리학회 2007년도 연차 학술대회논문집**, 494-495.

신효영, 방은령(2008a).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미래청소년학회지**, 5(3), 45-63.

신효영, 방은령(2008b).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4), 205-227.

위점애(2007).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

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문옥(2006). 저 출산을 대비한 출산 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입법정책연구회(2006). 출산장려를 위한 입법방향. **입법정책연구회**.

정연숙(2005).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문숙(2007).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계청. www.nso.go.kr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접 수 일 : 2009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0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11일